

제360호 (2012. 5. 14)

■ 경제 동향

- 소비자심리지수 올 들어 상승세

■ 정책 · 경영

- 가구 분화 가속화, 다양한 주택 상품 공급 필요
- 주택 거래 회복, 주택공급제도부터 개선해야

■ 정보 마당

- 미국 도로교통행정관협회의 ‘도로 안전 매뉴얼’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생활형 SOC와 주거 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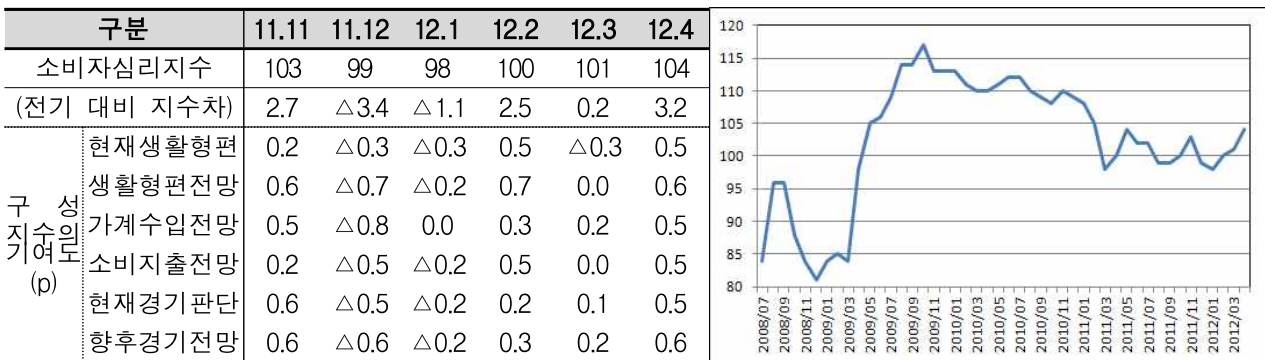
소비자심리지수 올 들어 상승세

-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심리 회복세, 부동산에 대한 심리는 여전히 위축 -

■ 금리 하락, 고용 증가 등으로 소비자심리지수 개선

-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 대비 3.2p 상승한 104p로 나타남.
 -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지표가 전월 대비 상승했으며, 현재 생활 형편(전월 대비 3p 상승)과 향후 경기 전망(전월 대비 7p 상승)은 큰 폭으로 개선됨.
 - ※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 심리가 과거(1999. 1/4~2008. 2/4)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을 경우에는 비관적임을 나타냄.
-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가 올 들어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2009년에 급격히 상승한 이후 지속적으로 위축되었으나, 올 들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가 회복세를 보임.
 - 최근 소비자물가지수의 보합세,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하락, 고용 증가 등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음.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주 : 소비자심리지수는 개별 지수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단순 평균하여 산출
 자료 :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 부동산에 대한 가치 전망 흐름은 위축

- 올 들어 자산 가치 전망 CSI가 금융 상품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부동산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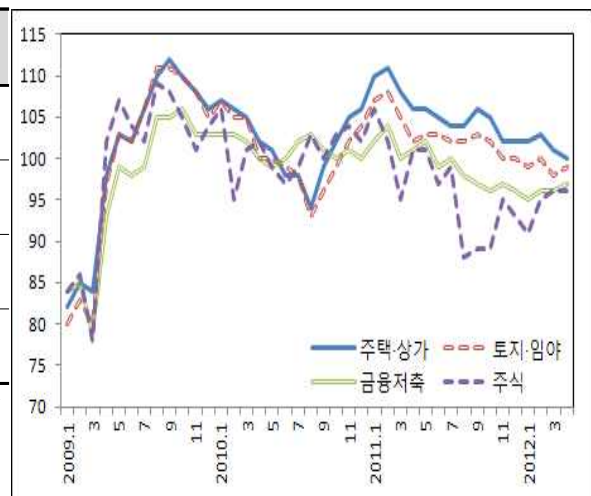
- 부동산은 최근 지방 주택시장의 상승세 둔화와 수도권 주택시장의 지속적인 침체로 인하여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화됨.
- 금융 상품은 경기 침체에 따른 안전 자산 선호와 유럽의 경제 불안 속에서도 큰 변동이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소폭 개선됨.

※ ‘자산 가치 전망 CSI’는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의 일부로 현재와 비교하여 향후 6개월 후의 자산 가치에 대해 조사하는 지수임.

- 4월의 자산 항목별 가치 전망 결과, 모든 자산에 대한 지수 값이 전월 대비 보합세를 보임.
 - 토지·임야(99p) 및 금융 저축은 1p 상승하였으나, 주택·상가(100p)는 1p 감소함. 주식(96p)은 보합세를 보임.

<항목별 자산 가치 전망 CSI>

구분	11.9	11.10	11.11	11.12	12.1	12.2	12.3	12.4
주택상가	106	105	102	102	102	103	101	100
토지임야	103	102	100	100	99	100	98	99
금융저축	97	96	97	96	95	96	96	97
주식	89	89	95	93	91	95	96	96



주 : 100 이상은 증가할 전망이 많으며, 100 이하는 감소할 전망이 많은 것을 의미

자료 :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식 전환 유도 필요

-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조치 등을 통해 소비자 인식 전환 유도가 필요
 -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으나, 부동산에 대한 전망까지는 긍정적인 심리가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 개선을 부동산 경기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융 규제 완화의 검토가 필요함.

엄근용(연구원 · kyeom@cerik.re.kr)

가구 분화 가속화, 다양한 주택 상품 공급 필요*

- 변화하는 수요 특성에 대응하지 못한 주택 공급으로 주택산업 마이너스 성장 초래 -

■ 가구 수 증가를 고려할 때 주택 공급 과잉 논란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 가구 수와 주택 재고량(stock)의 증감을 비교한 결과, 일정 부분 균형을 이루고 있어 최근의 ‘주택 공급 과잉 논란’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지난 20년 간 가구 수 증가는 연간 32만 호 수준을 유지함.
 - 반면, 주택 재고량의 증가는 1990~2000년 41만~35만호 → 2000~05년 31만호 → 2005~10년 28만호로 가구 수 증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변화하는 수요 특성에 대응하지 못한 주택 공급이 문제점

- 2000년 이후 가구 수 증가를 견인한 것은 소득 계층이 낮은 1~2인 가구였지만, 주택은 고급형 아파트 위주로 공급됨.
 - 가구 수가 증가한 1인 가구는 20~30대와 노인층의 비중이 높고, 취업자도 적어 주로 저가의 주택 상품에 임차의 형태로 주택을 소비하고 있음.
 - 반면, 2000년 이후 주택 재고량이 증가한 유형은 아파트와 다세대뿐이며, 특히 아파트의 집중 공급이 이루어짐.
 - 2000년 이후에 공급된 아파트는 빠른 분양가 상승과 함께, 브랜드를 갖춘 민간·분양·중형 이상의 비교적 고급형 상품임.
- 물량적인 균형에도 과도한 물량 중심의 목표 설정, 시장 성장에 대한 관성적 인식이 수요의 특성 변화를 간과하여 주택산업의 마이너스 성장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됨.
 - 최근의 주택산업의 어려움은 변화한 수요 특성에 대응하지 못한 고급형 상품 중심의 공급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주택 수주는 전체 건설 수주 목표 달성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침.
 - 수주 중심의 성과주의는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때는 유효하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시장 호황에 대한 관성적 낙관도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을 지연시킴.

* 본고는 ‘주택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한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발제 내용의 요약이며, 전체 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 수록되어 있음.

■ 주택산업, 주택 주력 소비 가구 감소에도 2025년까지는 기회 존재

- 주택시장에 미치는 인구·가구의 구조 변화는 2025년 전후가 가장 강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2~3단계에 걸쳐 노령화·저성장 시기로 이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2015년까지는 연간 증가 가구 수가 25만호 내외를 유지하고, 1인 가구와 고령자(60세 이상)의 비율도 30%를 넘지 않음. 2020년 이후에는 연간 증가 가구 수도 21만호 내외로 감소하고 1인 가구의 비율이 3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2025년 이후에는 연간 가구 수 증가가 20만호를 하회하고, 고령자의 비율이 40%를 상회하는 등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됨.
- 아파트라는 주력 상품은 유지하되 가구 형태의 다양화에 맞는 상품 및 사업 확장 필요
 - 주택 주력 소비 가구(가구주 연령 60세 미만 가구)가 감소하겠지만, 그 감소 속도는 완만하며 삶의 생애주기가 유지됨에 따라 2025년까지 주택산업의 기회는 존재함.
 - 아파트 상품에 대한 표면적 인식은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이사 희망 주택 유형으로는 더욱 강화되고 있음.
 - 아파트라는 주력 상품은 유지하되 신규 발생 수요들의 소득 계층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프리미엄 상품보다는 ‘일반 상품’과 ‘저가 상품’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음.
 - 가구 형태의 다변화 등을 고려하여 노인, 웰빙, 에너지 절약 등 특화 상품 개발 필요
 - 확대된 주택 재고량 및 가구 수를 고려할 때 유지·관리, 주거 지원 서비스 등 사업 영역의 확장도 동시에 필요함.

■ 가구 형태 및 수요 변화에 따른 주택 상품의 다양화 필요

- 향후의 시계열적 수요·공급의 변화를 고려할 때, 산업·정책·조직의 유연성 확대가 주택산업 혁신의 밑거름이 될 것임.
 - 과거의 양적·물량 중심의 목표 설정보다 수요 특성의 변화 포착과 수익성이 보다 중요
 - 2025년까지 인구·가구 구조가 시기별로 이행함에 따라 시기에 맞는 차별적 접근 전략 필요
 - 상품 종류와 가격대를 조합하여 다양한 상품 라인을 공급하고 현재보다 저가의 상품을 확장할 필요가 높음.

허윤경(연구위원 · ykhur@cerik.re.kr)

주택 거래 회복, 주택공급제도부터 개선해야*

- 변화된 주택 소비 구조에 부합 필요, 청약제도는 민영주택부터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

■ 신축 주택시장 판매 및 유통 구조 개선 없이는 시장 회복 어려워, 침체 가속화 우려

- 최근 지방의 신축 주택(이하 분양시장)시장과는 달리 수도권 분양시장은 전례가 없는 침체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있음.
 - 수도권의 경우 거시 경제의 영향과 향후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낮은 기대감으로 수요가 위축된 데 기인하나 근본적으로 신축 주택의 유통 구조가 시장 침체를 더욱 고착화
 - 정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구상을 하고 있지만, 신축 주택의 공급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의 신축 주택시장은 양적 규모 축소와 구조적 변화를 동시에 겪고 있음.
 - 200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53만호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던 신축 주택시장의 규모(인허가 기준)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40만호 수준으로 축소
 - 주력 상품의 구성 역시 ‘대규모 분양 아파트 중심’에서 ‘소규모 임대 주택 상품’으로, ‘중대형 고급 아파트’에서 ‘강소형 경제형 주택’으로 전환되고 있음.

■ 현행 주택공급제도, 주택 소비 구조의 변화 수용하지 못해 부작용 초래

- 신축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청약 관련 저축에 가입하고, 적정 자격 요건(기간, 무주택자, 주택 건설 지역 거주 등)의 1순위 자격을 획득해야 함.
 - 그러나, 정작 원하는 주택의 규모 변경에도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층수나 라인과 같은 선호 요인에 따라 구매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추첨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청약 기회’만을 부여받는 실정임.
- 일반 공급보다 더 많은 특별 공급의 기준이 산재한데다 가점제 등의 적용을 위한 기준 등이 너무 복잡하여 일반인들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제도에 대한 이해가 어려움.
 - 청약 현장에서는 제도의 복잡함에 따른 실수나 누락에 의한 부적격자가 다수 발생할

* 본고는 ‘주택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한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발제 내용의 요약이며, 전체 세미나 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 수록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청약 자격 박탈, 공급 절차 지연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최근 주택 임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임대 사업자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임대 사업자는 직접 건설업자 면허를 취득하고 임대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아니면 신축 아파트가 미분양되었을 경우에 이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음(신축 아파트의 1순위 분양 자격이 부여되지 않음).
- 20호 이상의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계획 기준에 의한 주택 사업 승인 외에 입주자 모집 시기, 절차, 선정 기준 및 자금 납부 방법, 판매 가격 등 거의 모든 판매 절차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 과거 주택 부족 시대에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 분배의 필요성이 절실했던 시절에는 현행 주택공급제도가 유효했으나, 현재는 소비자 만족도 측면이나 생산의 기술 혁신, 상품 다양화 등 어느 쪽에도 발전이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음.

■ 선택의 다양성이 확보된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제도로 개선해야

- 현행 주택공급제도는 주택이나 소비 구조의 물리적인 변화 흐름도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택’에 사람을 맞추는 정책임.
- 청약 저축 가입자 1,400만 시대, 언제 당첨될지 알 수 없는 ‘무용 통장’이 정치적 변수에 따라 ‘로또 통장’으로 급변하는 등 오히려 예측할 수 없는 시장 환경을 조장하고 있음.
 - ※ 막연히 청약 관련 통장을 하나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쓸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보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공공주택의 유형이 등장하게 되면 통장이 유용한 제테크 수단이 되기도 함.
- 신축 주택은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이미 주택을 갖고 있지만 신축 주택으로 교체하고 싶은 사람에게까지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기업에게도 개방되어야 함.
- 아울러 원하는 층수와 라인, 규모의 선택에 있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더욱 확대시켜 생산자로 하여금 혁신적인 신제품을 개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되어야 함.
- 한편, 중·서민층에 대해서는 현행 주택공급제도를 활용하여 청약 우선권 외에 다양한 금융 패키지 지원도 함께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김현아(연구위원 · hakim@cerik.re.kr)

미국 도로교통행정관협회*의 ‘도로 안전 매뉴얼’

- 교통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로 설계/유지관리 안전 백서 -

■ 도로 사용자의 안전성 제고에 대한 요구 증가

- 매년 교통사고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매년 약 5,500명(미국의 경우 약 35,00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액이 12조 9,598억원(미국의 경우 2,310억~4,3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통사고의 원인 중 약 34%가 도로 관련 요인(Roadway Factor)**으로 보고되었음.
 - 선진 외국의 경우 도로의 기하 속성이 사용자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들의 관계성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예 : 도로폭과 사망 사고 빈도의 관계).
- 도로 설계/건설 주체의 사용자 안전성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음.
 - 일례로 유지/보수 구간에서 신설된 좌회전 우회도로를 발견하지 못하고 폐쇄된 기존 도로를 그대로 진행하다 콘크리트 방호벽에 충돌한 사고에 대해 관례는 시공 관리자가 그 책임을 지게 하였음***.
- 이에 따라 도로 사업의 설계/운영/유지 관리 선진화를 통해 교통사고와 같은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음.
 - 미국 도로교통안전행정관협회(AASHTO)는 2010년에 ‘도로 안전 매뉴얼’ 초판(HSM, Highway Safety Manual, 1st Edition)을 발행하였고, 우리나라도 미국의 HSM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도로 안전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임.
 - HSM은 사고 빈도와 강도 측면에서 도로의 안전성을 측정, 추정,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정보와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안전성이 도로 건설 사업의 계획, 설계, 운영 및 유지 관리 단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를 다양한 분석 절차와 함께 설명하고 있음.

* AASHTO :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

** 도로의 선형, 차선의 폭, 교차로 및 신호등 체계 등과 같은 도로 설계와 관련된 제반 요소들을 의미함.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6.23. 선고, 99가합3323판결

■ HSM의 주요 내용

- 도로 건설 사업의 추진 단계별로 활용될 수 있는 도로 안전 매뉴얼(HSM)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계획 단계>

- 네트워크상의 사고 위험 지역 식별 방법
- 주요 거점의 개략 안전성 평가 및 거점별 상응 보호 조치 선정 방법
- 프로젝트의 우선 순위 결정을 위한 안전성 관점에서의 경제성 평가 방법

<설계 단계>

- 다양한 설계안에 대한 사고 빈도 및 강도의 영향 비교·분석 방법
- 보호 조치의 선정을 위한 주요 지점별 안전성 및 경제성 평가 방법
- 보호 조치로 인해 예상되는 성능 개선 정도 분석 방법

<운영 및 유지 관리 단계>

- 사고 패턴 식별을 위한 분석 방법, 사고 빈도 및 피해 모니터링 방법
- 도로 네트워크의 실시간 안전성능 평가 방법
- 도로 시스템의 안전성 증대를 위한 단기 개선책 발굴 방법
- 설치된 보호 조치에 대한 유효성 평가 방법

■ 도로 사용자의 안전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필수 사항

- 우리나라는 아직 도로 설계, 운영 및 유지 관리 단계에 사용자의 안전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HSM이 보편화되고 국내 도로 안전 매뉴얼이 완성 보급되면 현재 도로 설계 및 운영 유지 관리 프로세스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해외 도로 건설 사업 진출시 사용자 안전성의 고려는 국내 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미국 시장의 경우 HSM의 고려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었음.

강상혁(연구위원 · shkang@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및 세미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내용
5. 7	대한건설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SOC·주택실 주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TFT’ 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참여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향후 프로젝트 발굴 방향 논의
5. 8	건설근로자공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근로자고용복지실무협의회 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참여 - 건설근로자 종합 지원 계획 추진 실적 보고 및 향후 계획 마련, 건설근로자 호칭 개선 방법에 대한 논의 등
	건설기술연구원/ 건설교통기술평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기술정책포럼에 건설관리연구실 이영환 실장 참여 - 제1회 정책 포럼에 지명 토론자로 참여
5. 9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인력기재과 주최, 건설 기능인력 TFT 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참여 - 건설 기능인력 육성 실무 작업반 업무 분장 및 추진 계획 논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 4차 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참여 - 위험성평가제 확대 실시를 위한 정책 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
5. 10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정책과 주최, 건설 경기 및 고용 동향 관련 간담회에 건설경제연구실 이홍일 연구위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참여 - 최근 건설 경기 동향과 전망, 건설업 취업자 동향과 건설 경기와의 관계, 건설 인력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 등 논의

■ 주택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한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 연구원은 지난 5월 8일(화)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한 주택공급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1주제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통해 본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하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건설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이 발표를 하였고, 제2주제로 ‘주택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주택공급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건설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이 발표하였음.
- 주제 발표 후에는 이상한 한성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었음.

■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무과정 개설

- 기간 및 장소 : 5. 22(화)~25(금), 건설회관 9층 연수실
- 교육 내용 및 기획 의도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와 추진 전략, 사업성 분석 및 재무 모델 실습 등 실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자고 기획
- 문의 및 참조 : 연구원 교육팀(02-3441-0691, 0848),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생활형 SOC와 주거 환경 개선

우리나라의 강점으로 꼽히는 역동성은 경제활력의 기반을 이루기도 하지만 온탕냉탕식의 극단으로 흐르려는 경향이 단점도 있다. 단적인 예로 요즘의 복지논쟁을 꼽을 수 있다. 어느새 ‘성장’이라는 단어는 시대에 뒤떨어진 구호로 전락했으며, ‘복지’를 앞세워야 정치적으로 올바른 개념 있는 주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SOC 예산은 축소하고, 복지지출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금 흑평을 받고 있는 과거의 성장정책도 근본적으로는 성장을 위한 복지정책 측면이 있었으며, 향후에는 복지를 위한 성장정책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야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제대로 된 내년도 예산 수립이다.

성장에 중점을 두었던 때는 SOC 투자를 통해 물리적인 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이들 시설은 경제성장과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꾸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다. 국가물류비의 GDP 비중은 약 13%로 일본, 미국의 한 자리대 수치에 못미친다. OECD, 세계은행, IMD가 평가하는 시설별 경쟁력 평가도 20위권에 머물러 있다.

전통적인 개념의 SOC 축적에 아쉬움이 있지만 더 이상 과거 방식의 투자편중은 용인되기 어렵다. 그러나 SOC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우월한 고용 및 생산유발효과로 지방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큰 역할을 해 왔으므로 복지를 위해서라도 이 분야의 투자는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투자 내용이 ‘생활형 SOC’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수정돼 추진된다면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복지를 위한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따뜻한 성장이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요소라는 의식주 가운데 지역편차가 가장 큰 것이 주거다.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아니라도 주민의 삶터와 커뮤니티를 파괴하지 않는 소규모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기존의 유희 동사무소나 학교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해 행정, 교육, 노인복지, 육아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재해에 강한 건물, 교통망, 상하수도망 구축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무공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제공도 SOC 산업의 역할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국민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고부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어느 한 선택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 현명한 선택은 이것도 저것도 균형과 조화를 찾아 함께 추구하는 것이다. 복지만을 강조하는 일도양단의 선택은 자칫 복지와 성장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중용의 묘를 찾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기대해본다. <매일경제, 4. 30>

김흥수(원장 · infra@cerik.re.kr)